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2012.12.17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었던 만큼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만 보면 엇비슷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여야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면 대체로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세 방면의 공약으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전면적인 화두로 부상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 현실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5대 국민 생활 불안이라고하는 보육과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노후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이를 입증한다. 보편 복지를 거스르려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자 보수적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보편 복지
 ※ 보편 회복, 확대

[그림 1] 18대 대선의 주요 3대 의제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의 수준으로까지 부상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일 찌감치 이에 편승했다. 물론 선거 막판에 자신이 끌어들인 김종인 전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민주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비판해온 '진정성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0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위한 노동권 강화 역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대선의 중심 공약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때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의 낡은 정치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 가 정치혁신을 제기했고 이를 야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자, 정치 혁신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혁신이 필요한 이유도 어디까지나 지금의 경제 사회적 난국을 풀기위해서, 소모적 정치 구태를 벗고 미래 지향적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이 공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치 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알맹이를 모두 빼버린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퇴색하자 박근혜 후보는 '민생 우선' 구호아래, 이른바 '전 국민의 70%를 중 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사실 '양 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주장은 동어반복이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법'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맞다.

그렇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도 핵심은 경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였다. 다만 그 당시 선택의 결과가 '줄. 푸. 세'와 같은 주장을 했던 이명박 후보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최종 선택은 경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제 '줄. 푸. 세'는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함을 이명박 정부 5년이 보여주었고, 세계 금융위기가보여주었다.

임금과 소득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후보를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가장 본원적인 이유는 일하고 받는 임금 몫과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조건과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고용의 88%가 속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특히 재벌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다. 자영업자 포함하여 2500만 취업자



가운데 1천 만이 1~4인 규모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기억해보자.



[그림 2] 2000년 이후 대, 중소기업 임금상승률 변화 추이

이번 대선은 바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더욱 심해진 이러한 소득격차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격차가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말대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주장은 그래서 엉터리인 것이다.

금융을 제대로 규제하고 가계를 살릴 후보를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국민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조정과정을 밟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부채 증가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는 경제 규모가 늘어 가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방관한 결과다.

그에 따라 가계가 은행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규모도 사상 최대 금액으로 늘어났다.([그림 3] 참조) 특히 올해에는 가계가 추가로 은행에서 차입해 오는 규모보다 은행에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가정의 살림을 파산시키고, 국민경제마저 위기



에 빠뜨리게 된 것이다. 당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신음하는 저소득 다중 채무자와 중소 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본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에 대한 약탈적 대출 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의 공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공약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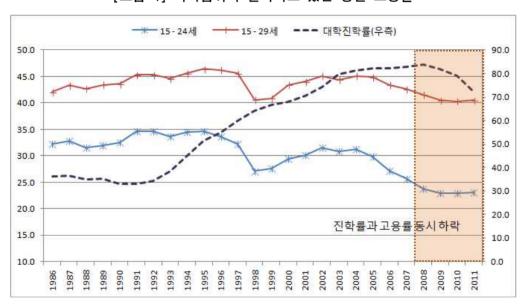
[그림 3] 매년 늘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이자 추정 규모의 변화 추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먹고살 희망을 주는 후보를

먹고사는 문제는 처음으로 사회로 나가 자립하려는 청년 세대들에게 절박하고 중요하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청년 세대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훨씬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고용률(취업자/청년인구)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주로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진학률이 처음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동시에 고용률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그 결과 대학진학률은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10%정도가 떨어진 72.5%로 내려갔다. 동시에 15~24세 청년 고용률은 23.1%, 그리고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 재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안 된 청년들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청년 해외취업 장려나 '창업으로 내몰기'는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해오던 것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부문부터, 그리고 대기업부터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업준비와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또한 적지않은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있는 청년 고용률

18대 대선은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후보를 선택하는 대선이다. 특히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권 방식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활동기회를 열어주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단, 이번에는 보수에게 경제를 맡길수 없다. 보수가 경제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수에게는 위기를 극복할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이 출간 되었습니다.

